

스마트기술 시대에 대비하는 스마트정책

허재준*

우리나라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5% 수준으로 OECD에 저임금근로자 비중을 보고한 나라들 중 가장 높다. 2010년부터 저임금근로자군의 임금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중위임금과 하위임금 간의 격차도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여전히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저임금근로자 임금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저임금근로자 규모가 누적적으로 증가해 온 탓에, 이러한 임금격차 축소 경향이 몇 해 동안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단기간에 현저히 줄어들기 힘들다.

더군다나 지난 30년간의 정보통신기술의 진보와는 질적으로 다른 스마트기술(인간의 고유 능력이라고 간주되었던 지능과 감성의 일부를 보완하고 확장하며 나아가 자체적으로 인간 지능을 내재화해 나가고 있는 ICT 및 융합영역의 신기술)의 진화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력을 대체하고 일자리 양극화를 초래하는 영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단초들이 발견되고 있다. 20세기에 기술이 인간의 ‘몸(brawn)’을 대체했다면 이제는 ‘뇌(brain)’를 대체하기 시작한 것이다.

스마트기술의 진화는 글로벌 경쟁구도 자체를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단순·반복·조작 업무뿐 아니라 지적 업무까지 대체하며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강력한 형태로 고기능 근로자에 대한 노동수요를 상대적으로 더 증가시키고 있다.

스마트기술은 노동수요의 숙련편향성(skill-biasedness)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중간직종의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다. 콜센터직원, 계산원, 대출·고객 상담원,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이제 트럭운전수, 배달원, A/S요원, 재고 관리자, 전문직 보조인력 일자리까지 스마트기기와 스마트기술이 대체할 전망이다. 전문지식이 플랫폼화되고 고기능화되어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의 권위가 약화되고 소수의 슈퍼스타가 시장을 과점하는 상황이 올 것으로 전망된다.

인간 노동력을 계량화·표준화하고 정량적으로 관리하며 컨베이어벨트 도입으로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켜 대량생산을 실현한 과거의 테일러리즘과 포디즘이 블루칼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hurjj@kli.re.kr).

라의 기술을 단순화·표준화시켰다면 새로운 디지털 테일러리즘과 포디즘은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의 기술을 단순화·표준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통해 작업환경과 인사관리의 패러다임이 다시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인더스트리4.0, 스마트매뉴팩처링으로 무장한 독일과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제조업 부문의 경쟁구도를 송두리째 바꿀 것이다. 이처럼 스마트 기술의 발전과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거대한 흐름으로 다가오고 있어 정책 패러다임도 그에 대처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한국 상품이 중국보다 가격경쟁력에서는 뒤지지만 시장경제 질서와 체질에서 중국보다 강점을 지니고 있다. 기술력에서는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에 비해 열위에 있지만 위기 복원력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은 일본보다 앞서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한국의 상대적 강점에 기초하여 스마트기술 시대를 준비한다면,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의 이행기에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었듯 디지털시대에서 스마트시대로 이행할 때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한국 경제가 국제적 선도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기술 확산이 가져올 갈등구조를 식별하고, 스마트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파생되는 갈등과 복지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현재의 복지·조세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정비하며 정치의 갈등관리기능을 제고할 것도 요청된다.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를 업그레이드 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교육, 의료, 안전, 복지의 영역에서 스마트기술을 구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스마트기술 확산에 장애가 되는 R&D체계, 창업규제, 경쟁규범, 노동시장규범, 인적자원개발 체계, 사회적자본, 문화규범의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들은 모두 비전통적 수단을 새로운 환경에 접목시키고 검토해 보는 실험정신과 함께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을 요구한다.

노동시장 참여자의 적응을 돕고 시장력이 초래하는 격차를 조율할 지혜도 요구된다. 노동시장에서 계약의 자율성을 중요시하는 미국은 저임금근로 압력을 조율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도, 근로장려세제(EITC), 취약계층 의료보호제도(Medicaid)와 식비 및 주택보조금 등 저임금근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도시 지역정부 차원에서도 생활임금조례, 반착취 공공조달조례, 양허협약, 지역정부 토지사용시의 협약 등의 형태로 저임금근로자 보호를 시도하고 있다.

스마트기술 시대를 대비하는 산업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계획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노동시장 파급효과를 예측하고 스마트한 정책 틀을 모색해야 스마트기술 시대의 청사진이 완성될 것이다. **[KLI]**